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8. 1.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목 차〉

Ⅰ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퇴출된 나와즈 샤리프 전 파키스탄 총리 부패 혐의로 기소 ···· 1
□ 중국 반부패 감시기구 권한 확대 ····· 3
□ 인도네시아 반부패 기구, 두 번째 시도 끝에 세트야 노반토 하원의장 체포 ···· 5
□ 베네수엘라 석유공사 임원 2명 부패 혐의로 체포 ····· 7
□ 러시아의 올림픽 도핑 내부고발자 일가족에 대한 푸틴의 보복 우려 ····· 10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 위원 위법행위 혐의로 경찰에 체포 ··· 13
□ 텔아비브에서 열린 네타냐후 총리 부패 항의 시위에 수 천명 참여 ····· 15

Ⅱ 한국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한국 반부패법 입법 1년, 일부 업계에서 지나치다는 비판 나와 ····· 16
□ 주한미군기지 부패 스캔들로 곤혹 ····· 19

Ⅲ 국제회의 동향

□ 제6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 ····· 21
□ 제7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 23
□ 2017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및 조정그룹회의 ····· 25
□ 제5회 반부패 준법 아태지역 회담 ····· 27

Ⅳ 옴부즈만 소식

□ 영국: 의회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탁아동 ····· 28
□ 크로아티아: 에너지 빈곤층 방지 정책 발표 ····· 30
□ 호주: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 관리 조사 ··· 31
□ 핀란드: 페트리 야스켈라이넨 옴부즈만 연임 ····· 34
□ 세계옴부즈만협회: 신임 아시아 지역 이사 선출 ····· 35
□ 노르웨이: 오게 토르 팔캉에 옴부즈만 재선 ····· 36
□ 영국: 옴부즈만, ‘예방 가능했던 거식증 여성 환자 사망’ ····· 37

Ⅴ 참고자료

□ 아태지역 내 반부패기관 강화 ····· 39
□ 아태지역 국가의 반부패기관: 활동 평가 및 과제 ····· 43
□ 대한민국 2017 세계자유보고서 ····· 46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퇴출된 나와즈 샤리프 전 파키스탄 총리 부패 혐의로 기소 (The Guardian, 2017.10.19)

○ 가족 소유의 고가 런던 부동산 관련 혐의로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전 총리가 반부패 법원에 기소되면서 축출된 지도자의 수감이 가능할지도 모르게 됐다.

○ 샤리프 일가는 지난해의 파나마 페이퍼 유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으나 이번 기소로 인하여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두바이 소재 회사로부터 받은 2,000 파운드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7월 퇴출된 샤리프 전 총리는 딸 마리암 나와즈, 사위 무함마드 사프다르와 함께 기소됐다.

○ 세 명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기소 후 이들의 변호인은 '혐의에 근거가 없으며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인은 또한 '불완전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보고서에 근거하여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이름뿐인 정의, 가짜 정의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샤리프 전 총리는 현재 부인이 수술을 받고 있는 런던에 머물고 있지만 파키스탄 하원의장은 부인의 상태가 호전 되는대로 샤리프가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리프 전 총리는 또한 아들 후세인이 관련된 제철소 소유권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됐다.

○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 샤리프는 자신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분투해왔다. 이번 달 샤리프의 파키스탄이슬람동맹당에서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독 출마한 샤리프를 당대표로 재선출했다.

○ 샤리프의 정치적 업적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강했던 지난 9월 선거에서는 그의 부인 쿨숨 나와즈가 샤리프의 지역구인 라호어에서 딸 마리암의

선거운동에 힘입어 당선됐다.

○ 샤리프의 지지자들은 그의 퇴출이 대법원의 월권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샤리프의 오랜 정적인 군부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

○ 목요일 법원 밖에서는 나와즈 샤리프의 딸 마리암 나와즈가 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였다. 마리암 나와즈는 '각 기관은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불의와 잔학행위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일각에서는 전 총리를 '부정'이라는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샤리프의 재산을 조사한 후 파키스탄 대법원은 반부패청에 샤리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시행을 명령했다.

○ 파나마 페이퍼에 따르면 샤리프의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였던 당시 그들 명의 해외 보유 재산으로 문제의 런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아버지의 대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는 나와즈 샤리프의 딸 마리암 나와즈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폰트는 문서가 작성됐다고 하는 시점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화요일 기소 몇 시간 전 파키스탄 반부패청 대표단이 런던에 도착하여 샤리프 일가 소유의 부동산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

○ 파키스탄 반부패청은 샤리프의 아들 후세인과 하산의 영국 추방을 위한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신청을 내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샤리프의 측근인 아산 이크발 내무부 장관은 아직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 원문기사 : Ousted Pakistan PM Nawaz Sharif indicted over corruption claims (The Guardian, Oct. 19, 2017)

중국 반부패 감시기구 권한 확대 (FINANCIAL TIMES, 2017.10.19)

○ 국가 전반에 광범위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산당의 시도에 힘입어 중국 반부패 기구의 권한이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 목요일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기율 감시 기관이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 기관뿐만 아니라 집권당 내부에 대한 모든 감독을 담당하는 중앙 기관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 이번 주 열린 중국 공산당의 간판행사인 전인대에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 시진핑 주석이 정권 장악을 위하여 부패 척결을 내세우면서 중국 반부패 감시기구의 권한은 이미 상당히 강화된 상태이다.

○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또한 잘못을 자백할 때까지 공산당원들을 몇 달이고 가두어 두면서 변호사나 가족들과의 접촉까지 차단하는 비합법적 수단인 '슈앙구이(shuanggui, 雙規)'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면서 퇴행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지난 수요일 3시간 반 동안의 연설 마지막 순간에 시 주석은 이러한 불법적 구금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구금 관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 북경에서는 반부패의 대표인사이자 금융전문가, 그리고 시 주석의 주요한 측근인 왕치산이 이 새로운 초정부기구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왕치산이 중국의 최고 통치기구인 7인의 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임할 것인지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면서 이번 주 전인대 준비 과정은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 감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새로운 반부패 기구는 왕치산이 이끄는 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보다도 더 큰 권한을 부여받고 유례없는 공산당과 행정당국 공동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그 동안 항상 88명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양 샤오두 사무차장은 목요일, '이 문제의

핵심은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당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양 샤오두 사무차장은 또한 슈앙구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상세 사항은 아직 결정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밝혔다.

○ 시 주석의 집권 하에 재기에 성공한 중국 공산당은 지난 수십년간의 경제 개혁 기간 동안 정부 행정부문으로 옮겨갔던 권한을 회수하고 있으며 재계 등을 포함하여 중국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이 새로운 반부패 기구가 전문성을 갖춘 판사와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십년 간의 노력 끝에 권한이 약화되는 결과를 맞이한 중국의 사법체계를 대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양 샤오두 사무차장은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슈앙구이는 중국어로 '2중 지정'이라는 뜻인데, 조사를 받는 당원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조사 장소에서의 보고를 위하여 소환되는 데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실질적으로 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수개월 간 실종된 상태로 공산당 조사관들이 감시하는 외딴 근거지나 호텔 등에 감금된다는 뜻이다.

○ 슈앙구이를 통하여 58,000 명의 공무원을 법정에 세운 4년간의 집중 반부패 활동 기간 동안 자행된 인권 유린 문제는 일반 당원들 사이에 반발을 야기했다.

○ 슈앙구이 제도 하에 자행되는 고문에 대한 국제인권감시기구 Human Rights Watch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반부패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로 총 11명이 슈앙구이 제도에 따른 구금 중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 발간 이후 왕치산 위원장은 인권 유린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조사 과정을 녹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인권변호사들의 수년간의 캠페인 이후 2010년 중국 민사재판소에서는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 적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유죄 판결에 대하여 증거보다 자백에 의존하는 관행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시 주석의 집권 하에 중국의 많은 인권변호사들이 구금되거나 수감됐다.

※ 원문기사 : China expands power of anti-corruption watchdog(FINANCIAL TIMES, Oct. 19, 2017)

인도네시아 반부패 기구, 두 번째 시도 끝에 세트야 노반토 하원의장 체포 (ABC, 2017.11.20)

○ 전자신분증 사업과 관련하여 2억2천5백만 달러의 국고 손실을 야기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인도네시아 반부패 기구에 구금됐다.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수감자들을 위한 주황색 조끼를 입은 세트야 노반토 하원의장이 지난 일요일 병원에서 나와 자카르타에 위치한 부패방지위원회 본부에 위치한 피의자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 독립기구인 KPK에 구금되었던 정치인 중 노반토가 가장 고위인사이다.

○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인 노반토는 금요일 밤 체포됐으나 KPK에서는 전날 있었던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 치료를 받을 때까지 노반토의 구금을 집행하지 않고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KPK의 라오데 무함마드 샤리프 부위원장은 KPK의 페리스코프 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을 통하여 노반토가 더 이상 병원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으며 '따라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구금 연기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 일요일 밤 노반토는 기자들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 팔, 머리 부상 때문에 아직도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 노반토는 '오늘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회복을 위한 시간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 KPK 직원들은 인도네시아의 제2 정당이고 집권 연합정부의 파트너이자 골카르의 당대표인 노반토를 지난 수요일 밤 그의 자택에서 체포하려 했다.

○ 그러나 TV 카메라를 대동하고 체포에 나섰던 수사관들이 노반토를 찾아내는 데 실패하면서 노반토가 은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그 후 노반토는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노반토의 변호인 프레드리히

유나디는 교통사고 당시 기자가 운전을 하며 노반토를 인터뷰 중이었다고 말했다.

○ 노반토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수개월 간 KPK의 조사 출석 요청에 불응하면서 몸이 좋지 않으며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6,600에서 7백2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달 금액을 부풀린 후 이를 의회의 국회의원 사이에 나눠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KPK에서는 전자신분증 사업과 관련된 2억2천5백만 달러의 국고 손실에 관하여 조사를 벌여왔다.

○ 노반토 하원의장은 지난 달 논란이 많은 법적 제도인 재판 전 이의제기 신청 제도를 통하여 초기 혐의 무효 판정을 받은 후 11월 10일 다시 피의자 신분이 됐다.

○ 노반토의 변호인은 노반토를 대리하여 다시 한 번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가운데 신문에서는 연일 관련 1면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노반토를 조롱하는 풍자를 내놓고 있다.

○ 정치인과 경찰의 지속적인 폄하에도 불구하고 KPK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 KPK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KPK는 지난해 91명을 조사했으며 이는 15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원문기사 : Indonesian Speaker Setya Novanto arrested on second attempt by anti-corruption agency (ABC, Nov. 20, 2017)

베네수엘라 석유공사 임원 2명 부패 혐의로 체포 (The New York Times, 2017.11.30)

○ 지난 목요일, 얼굴을 가린 정부 요원들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고위임원 2명의 자택을 급습하여 이들을 체포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두고 부패와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칭했으나 반대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숙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넬슨 마르티네스와 에울로지오 델 피노 외에도 베네수엘라의 거대 석유공사 페트롤레오스 데 베네수엘라와 미국 소재의 정유사 시트고의 고위 임원 다수가 최근 줄지어 구속됐다. 부패와 업무방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혐의로 지금까지 50명 이상의 임원이 구속됐다.

○ 베네수엘라의 타렉 윌리암 사브 검찰총장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페트롤레오스 데 베네수엘라의 대표 자리에 있었던 전 석유부 장관 마르티네스는 정부 허가 없이 부채 차환 계약을 시도한 혐의로 목요일 오전 체포됐다.

○ 사브 검찰총장은 또한 마르티네스의 전임자인 델 피노가 생산 통계 위조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수익 손실을 야기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 사브 검찰총장은 문제의 두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석유산업을 갉아먹고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 '카르텔'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델 피노는 체포 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자신이 부당한 정치적 공격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석유공사의 부패 문제가 항상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은 이번 사태로 바뀐 것이 지난 2년간의 식품 및 의약품 부족 사태와 다가오는 국가부도사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집권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운명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툴레인 대학교에서 베네수엘라학을 연구하는 정치학과 다비드 스밀데 교수는 '왜 갑자기 여기에 관심을 집중시키는가?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에 대한 희생양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고의 대부분을 석유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의 생산 급감과 맞물린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 Pdvsa라고 불리는 페트롤레오스 데 베네수엘라는 현재 260억 5천만 달러의 무담보공채에 대하여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며 시추와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와 용역업체에 600억 달러를 미지급한 상태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제제로 인하여 Pdvsa으로의 자금 유입이 차단되어 있으며 이러한 무질서한 지급불능 상태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시트고의 자산을 압류하려 할 수도 있다.

○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주 군 장성 마누엘 케베도 장군을 Pdvsa 대표로 임명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회사에 변화의 전기를 마련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군과 마두로 대통령 사이의 유착을 강화시킴으로써 회사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군에서 Pdvsa의 오일 머니를 유용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라이스 대학의 베네수엘라 에너지 전문가 프란시스코 J. 모날디 교수는 '마두로 대통령은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Pdvsa의 회생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 시장 안정화 조치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 일각에서는 특히 델 피노의 구속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최근 구속된 여타 많은 Pdvsa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델 피노는 유엔 대사 자격으로 올해 마두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전 Pdvsa 임원 라파엘 라미레스의 측근이다.

○ 수요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라미레스의 UN 대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라미레스는 UN 대사직을 잃은

상태이다.

○ 스밀데 교수는 '마두로 대통령은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 모날디 교수는 델 피노와 마르티네스가 대표로 재임하던 기간 중 Pvdsa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류 상 수치 부풀리기와 같은 위법행위는 정부의 재정상태를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 모날디 교수는 부패 혐의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8월 임명되면서 TV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찬사를 받았던 두 전직 임원의 운명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마두로 대통령은 야구 관련 예를 들면서 이들을 '경기를 승리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 두 명의 4번 타자'라고 불렀다.

○ 델 피노는 웃고 마르티네스는 박수를 치던 순간이었다.

※ 원문기사: Venezuela Arrests 2 Former Oil Officials, Claiming Corruption (The New York Times, Nov. 30, 2017)

러시아의 올림픽 도핑 내부고발자 일가족에 대한 푸틴의 보복 우려 (HUFFPOST, 2017.12.5)

○ 2016년, 그리고리 로드첸코프 박사는 국외로 나와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한 국가 주도의 광범위한 도핑에 대해 폭로했다.

○ 이에 따라 IOC에서 러시아의 2018년 한국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하면서 로드첸코프 박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가 자신과 그 가족에 보복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상시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 로드첸코프 박사의 변호인 짐 월든은 화요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박사는 러시아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가족에 대하여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가족에 대한 보복 시도가 있는지 지켜봐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월든은 또한 '러시아 대통령궁은 그리고리씨에게는 매우 어렵고도 강력한 상대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리고리씨는 평생 뒤에 누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걱정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러시아의 반도핑 연구소장이었던 로드첸코프 박사는 2016년 처음으로 뉴욕타임즈에 러시아의 국가 주도 도핑 의혹을 폭로했다. 또한 러시아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자국 선수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수백, 혹은 수천 개의 샘플을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했다.

○ IOC는 지난 화요일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의 2018년 올림픽 참가를 금지했으며 부총리 비탈리 무트코를 비롯한 두 명의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고위 임원을 영구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 선수들은 제한적인 개인 자격으로만 2018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 IOC와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수 차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자국 선수와 임원들에 대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요일 이전에는 IOC의 러시아 출전금지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푸틴 대통령은 로드첸코프 박사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만한 인격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칭했다.

○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11월 로드첸코프 박사를 미국에서 러시아로 송환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와 미국은 범인 상호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 로드첸코프 박사의 변호인 월든은 지난 11월 'WADA에 정책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을 금하고 있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체 하고 그 대신 로드첸코프 박사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 월든은 또한 지난 화요일, WADA 측에서 러시아 정부에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푸틴 통치 하의 러시아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해 왔으며 국제 비정부기구 Human Rights Watch는 러시아가 오늘날 '냉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억압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비평가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다.

○ 널리 알려진 여러 사건의 내부고발자와 정부 반대인사들은 의심스러운 상황 하에 수감되거나 사망했다. 2009년, 러시아인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미국인 은행가를 표적으로 한 수백만달러 상당의 부패 사건을 폭로한 후 수감되었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이 사건은 러시아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미국의 제제 조치를 촉발했다.

○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이전에 러시아는 정부와 올림픽을 비판한 환경운동가를 투옥했다. 2015년에는 푸틴과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인사가 모스크바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로 망명했던 러시아 전 국회의원이 푸틴 정부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은 지 불과 몇 시간 후 키예프에서 살해당했다.

○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모든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 지난 화요일 전화 인터뷰에서 월든은 '로드첸코프 박사는 러시아의 다음 올림픽 출전 금지 조치가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월든은 또한 '로드첸코프 박사가 러시아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백한 러시아 선수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박사가 바라는 것은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말로만 하는 반도핑 개혁을 멈추는 것이다. 박사는 조국을 매우 사랑하고 러시아인들이 정부가 악습에서 벗어나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 월든은 또한 로드첸코프 박사가 러시아를 떠난 후 가족과 연락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월든은 '지속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로드첸코프 박사에게는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해서 몹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가 진실에 직면하는 대신 막장에 가까운 대응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가족에게만은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고 해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원문기사 : Russian Olympic Doping Whistleblower Fears Putin Will Retaliate Against His Family (HUFFPOST, Dec. 5, 2017)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 위원 위법행위 혐의로 경찰에 체포 (REUTERS, 2017.12.8)

○ 베트남 경찰은 금요일 국영 에너지 기업의 사장직 수행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 위원을 구속했다.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소는 수십 년 내 처음 있는 경우이다.

○ 베트남 공공안전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경제적 경영을 위한 국가 규제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혐의로 56세의 딘라탕에 대하여 체포 영장 및 기소 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공산당 내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안보대책 수립 이후 박차를 가하게 된 에너지와 은행 부문 위법행위 광범위 단속으로 체포된 고위임원 중 딘라탕이 가장 고위급이다.

○ 경찰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딘라탕의 베트남 석유·가스공사 페트로베트남의 사장 재직 중 발생한 두 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베트남 국내 은행 오션뱅크에 대한 투자 손실과 페트로베트남의 자회사인 페트로베트남 건설합작회사 (PVC) (PVX.HN)의 위법행위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

○ 딘라탕은 해명을 내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지난 8월 PVC의 전임 사장 트린 슈안 탄이 독일에 망명신청을 한 후 베를린에서 탄을 납치했다며 독일이 베트남을 규탄한 사건이 국제적으로 보도되면서 베트남의 부패 단속이 이목을 끌었다. 베트남 공산당은 탄에 대한 재판을 다음 달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반대파에서는 이번 부패 단속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2016년 내부 권력다툼에서 패한 후 축출된 응우옌 탄 둥 전 수상의 측근들을 그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라이덴 대학교의 베트남 전문가 조나단 런던 교수는 '이번 사태는 베트남 정치사의 중대 사건이며 고위 공산당 간부와 공무원들 사이의 대규모 부패 사건 및 심각한 불법행위를 통제하고 기소하기 위한 당 간부들 사이의 공조 노력을 잘 드러내 주는 증거이다'라고 말했다.

○ 딘라탕이 페트로베트남에 끼친 경제적 손실에 대한 그의 책임 여부가 밝혀진 이후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그를 출당시켰다. 또한 추가 처벌을 위하여 호치민 시당 대표직을 박탈했다.

○ 일당체제 국가인 베트남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을 기소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 위원 호앙 반 호안이 1979년 국외 망명 이후 궐석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 경찰은 지난 금요일 페트로베트남의 전 사장 응우옌 쿠옥 칸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지난 9월에는 또 다른 페트로베트남 전 사장에 대하여 여러 죄목 중 특히 횡령죄로 사형이 선고됐다.

○ 무역부는 성명서를 통하여 칸의 무역부 장관직이 임시로 박탈되었다고 밝혔다.

※ 원문기사 : Vietnam police arrest ex-politburo member over misconduct (REUTERS, Dec. 8, 2017)

텔아비브에서 열린 네타냐후 총리 부패 항의 시위에 수 천명 참여 (Reuters, 2017.12.10)

○ 직권남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2주 연속 이어졌다.

○ 두 주 전 토요일 시위에 이어 이번 주 두 번째로 열린 시위에 경찰 추산 약 만 명이 참여했다. 지난 주 토요일에 열린 항의 시위에는 약 2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어 근래에 열린 주말 반부패 항의 집회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의혹으로 인하여 시위가 촉발되었으나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4선 총리인 네타냐후는 두 건의 부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네타냐후 총리가 부유한 기업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경쟁 신문사에 제제를 가하는 대가로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도록 신문 사주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 형사 기소가 이루어지면 네타냐후 총리는 중대한 사퇴 압박에 직면할 수 있으며 통치 권한 유지 가능 여부에 대한 표결을 제청할 수 있다.

○ 네타냐후 총리의 보수 집권당 리쿠드당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항의 시위는 좌파 세력의 집회일 뿐이라고 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발언 이후 높아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총리를 국민들이 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리쿠드당은 또한 '진보세력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자중하지 못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수 주간 열린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진보 및 보수 정당 양측 모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다. 참가자들은 '진보, 보수가 아닌 청렴(을 원한다)', '(정치인의) 부패는 지긋지긋하다', '부패를 척결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지난 토요일 시위에 나왔다.

※ 원문기사 : Brazil's new top prosecutor is sworn in, says will maintain graft fight (Reuters, Sept. 19, 2017)

2 한국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한국 반부패법 입법 1년, 일부 업계에서 지나치다는 비판 나와 (PRI, 2017.11.29)

○ 한국인들에게는 직장 동료나 교사, 사업 파트너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따뜻한 정의 표현이 아닌 잠재적인 범죄가 되었다.

○ 한국의 폭넓은 부정청탁 금지법은 교사, 기자,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통해 일상적인 부정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선물과 뇌물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목표이다.

○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발효 이후 300명 이상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조사를 받았다.

○ 서울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법학과의 김준기 교수는 '김영란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부정청탁 금지법이다. 극단적인 조치이지만 결국에는 한국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준기 교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부분적으로는 2014년 수학여행을 떠나던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던 세월호 침몰로 30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해당 선박 회사의 모회사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월호에 출항 허가가 내려지도록 항만 직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결과를 낳은 스캔들의 핵심에도 뇌물 수수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정부에서 삼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자선 단체에 수백만 달러를 출연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 그러나 김준기 교수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부정한 뇌물 수수 관행에 제한을 가하는 동시에 일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칠 수 있다고 말한다.

○ '초등학생이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꽃 한 송이를 드리고 선생님이 그 꽃을 받는 것도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 또한 선물을 주고받는 한국의 전통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산업은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 양씨라는 성만 밝힌 한 플로리스트는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양씨는 서울 시내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정청탁 금지법 발효 이전까지는 고객의 대부분이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 양씨는 '부정청탁 금지법 때문에 이 지역에서 20~30년간 운영했던 꽃집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 양씨는 꽃집 매출에 가장 큰 타격이 된 것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보내는 화환의 매출 하락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화환의 가격은 최대 30만원(280달러)에 달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기자, 교사가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최대 금액을 5만원(46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 양씨는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알지만 소규모 자영업을 죽이고 있다. 꽃 선물은 한국에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 한우업계 역시 2016년 부정청탁 금지법 발효 이후 수익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의 황엽 협회장은 한국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에 전통적으로 한우 선물세트를 주고받았는데 한우 가격은 보통 부정청탁 금지법의 선물 금액 상한선을 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 '한우가 비싸고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선물하는 것이다. 부정청탁 금지법을 지지하지만 지역 특산품 농수축산물에는 선물 금액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황 협회장이 덧붙였다.

○ 부정청탁 금지법의 추가 조항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접대비용 상한선을 3만원(28달러)로 정하고 있다. 황 협회장은 이 때문에 음식점에서 한우

주문 역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본부 관계자는 화훼업계와 한우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업계 제품은 보통 공무원들이 자신의 돈이 아닌 세금으로 구입해왔기 때문에 애초에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한다.

○ 그리고 '처음에는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반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또한, 부정청탁 금지법이 냉정해보일 수는 있지만 한국의 선물 문화를 완전히 말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원문기사: A year after South Korea passed an anti-corruption law, some businesses say it goes too far (PRI, Nov. 29, 2017)

주한미군기지 부패 스캔들로 곤혹 (Deutsche Welle, 2017.12.4)

○ 해외 미군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의 캠프 험프리스 공사 중 나온 보도에 따르면 공사 계약 수주를 대가로 한국 대기업이 3백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의 캠프 험프리스 확장 공사는 해외 미군기지 역사 상 가장 큰 규모의 공사이다. 서울에서 70km 남쪽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는 2020년 완공 후 전 세계 해외 미군기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게 된다.

○ 험프리스 기지에는 최대 42,000명의 미군이 주둔에게 될 것이고 이들이 향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지 주변에는 작은 미국이 함께 건설되고 있다. 이곳에는 수십 개의 미국식 패스트푸드점, 골프장, 워터파크, 축구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라고 불리는 한-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은 험프리스 기지 확장비용 110억 달러 (92억 유로)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한국 건설업체들에게 이는 둘도 없는 사업 기회이고, 이러한 기회를 따내기 위해 한국의 거대 건설회사가 전 미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 지난 금요일 한국의 서울지방검찰청은 한국 재계 순위 3위의 재벌기업인 SK그룹의 계열사 SK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조사와 관련하여 SK건설의 험프리스 기지 건설계약 정보가 담긴 하드드라이브와 문서들을 압수했다.

○ SK는 험프리스 기지의 건물과 함께 도로, 상·하수도와 전력 시설의 건설을 담당했다.

○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 계약 담당자로 근무하던 미국인과 한국 공군 영관급 장교 출신이자 국방부 근무 이력이 있는 한국인이 4억 달러 이상 규모의 공사계약을 SK건설에 발주하는 대가로 3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둘은 기소된 한국인의 계좌에 뇌물로 받은 돈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만연한 부패

○ 최근 수년 간 여러 건의 SK 관련 부패 스캔들이 터져 나왔으며 험프리스 기지 의혹은 그 중 마지막 사건이다. 2013년, SK의 최태원 회장은 450억원(4224만 달러) 이상의 횡령죄로 2년간 복역했다. 2015년 석방 후 최 회장은 SK 경영에 복귀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복역 중 1,700번 이상의 접견을 허용 받는 특혜를 누렸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다.

○ 5월 취임한 한국의 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재계에 만연한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SK 사건은 문대통령의 공약에 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미국?

○ 주한 미군의 수는 28,500명에 달한다. 현재 미국은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서울 중심부에 위치했던 용산 주한미군기지가 문을 닫고 북한의 재래식 무기 사정권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서 지리적으로 미군에게 유리한 험프리스 기지로 옮겨가는 것이다.

○ 그러나 미군의 한국 주둔은 끊임없이 긴장을 발생시켜 왔다. 미군기지 이전은 한국의 막대한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야기했다. 지난 수요일 발간된 환경보고서는 용산기지 주변의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폭로했다. 시험 결과 발암물질인 벤졸 농도가 허용치의 7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사이에 과격한 말들이 오가면서 미군의 한국 주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트럼프의 도발적 언사와 초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설치에 반발했으며 최근 수개월 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 미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미군은 험프리스 기지를 '태평양 지역 최대의 군사전력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다.

○ SK 뇌물 스캔들이 험프리스 기지 확장 사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업에 누가 돈을 내놓든 미군의 한국 주둔은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 원문기사: US military base in South Korea mired in corruption scandal (Deutsche Welle, Dec. 4, 2017)

3 국제회의 동향

1 제6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7.10.2.(월) ~ 10.4.(수), 이집트 샴엘셰이크 사보이 리조트

○ 기관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참석 : IACA 40개 당사국 및 7개 옵저버 대표단

※ 우리측 : 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임채수 청렴연수원 과장, 강미영 사무관

2. 회의 주요 결과

○ 회의 주요 결과

- 고위급 일반토론에서는 21명의 장차관등 고위급 대표가 자국의 반부패 노력, IACA와 협력활동 및 향후 IACA 재정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 총회는 2017-2020 업무계획, 18년 예산안, 자산회복, 재정안정성 등 총 8개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2017-2020 업무계획은 이사회 승인안에, 장학금 확대 등 저개발국가 지원 강조 의견을 추가하고, IACA의 신규 활동 아이디어 부분을 제외하는 안으로 최종 합의
- 자산회복 관련 결의안은 '16년 12월 채택된 UN총회 결의안에서 자산회복 관련 법적 제도 연구를 IACA에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채택
- 한편, 이사회, 학장 및 오스트리아 정부 대표는 당사국들이 재정 안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과 소액이라도 정기적 기부를 요청

○ 위원회 활동 내용

- 고위급 일반토론에서 새정부의 반부패 추진 방향, 이해충돌방지 및 신고자보호 강화 등 정책과, 위원회와 IACA간 협력활동 등을 발표
- 이라크 청렴위원회 위원장과 MOU 체결 및 양 기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양자 회담을 개최

- 동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반부패기관 관련자들과 면담

3. 관찰 및 평가

○ 일반사안에 대한 결의안에서 IACA의 국제 교육·연구 기관으로서의 인식제고 및 학위과정 인정 등을 합의한 바,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동참 노력 필요

○ 재정 안정성과 관련해, 한국은 IACA 인력 파견 및 매년 맞춤형 연수 비용 부담 등의 재정기여를 하고 있으나, 타 당사국들의 기여 수준과 관련 논의 결과에 따라 우리측의 추가 기여 검토 필요

○ 결의안 대부분이 비공식회의에서 당사국 논의로 합의되는 바, 향후 비공식회의에의 참여 방안 검토 필요

② 제7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7. 11. 6.(월) ~ 11. 10.(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158개국 및 서명국(시리아) 대표, UNODC, UNDP, OECD,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등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1,600여 명

※ 한국 대표단: 권익위 위원장, 국제교류담당관 등 4명,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등 2명, 외교부 오스트리아 대사 등 4명 참석

2. 회의 주요 결과

○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 **(정부대표 기조연설)** 박은정 위원장은 11월 6일 정부대표 기조발언을 통해 한국사회가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복한 것에 대한 의미를 피력하고 새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설명함

- **(각국 대표 연설)** 부패자산 회복을 위한 기술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과 관련된 협약 이행점검 체계와의 시너지 강화 및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요청함

- **(결의문 채택)** ① 국제협력 및 자산회복을 위한 사법공조 강화, ②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에 기초한 대규모 부패 등 모든 형태의 부패 예방 및 척결, ③ 유엔반부패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 촉진, ④ 반부패 분야 점검 메커니즘 관련 국제기구 간 시너지 제고, ⑤ 부패예방 조치 장려, ⑥ 부패예방에 관한 마라케시 선언 후속조치, ⑦ 소규모 도서 개도국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강화, ⑧ 스포츠 분야 부패 등 총 8개 결의문 채택

○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 신규 비준국(일본, 니우에)에 대한 점검국 추첨 및 이행점검 2주기 2차년도 ('17,6월~'18,6월) 점검국에 대한 재추첨 실시

- 니우에의 점검국으로 대한민국이 선정됨

○ 위원회 주요 활동

- 박은정 위원장은 이라크 청렴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한-이라크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 카타르 행정투명성청장과의 만남에서도 청렴도평가, 반부패 교육 등 반부패 정책 이행 경험 공유를 통한 한-카타르 간 반부패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함
- 아울러, IACA 학장, UNDP 거버넌스국장 등 국제기구 대표들과 면담하여 향후 반부패 역량 강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3. 평가 및 향후계획

○ 관찰 및 평가

-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국제사회에 홍보
- 이라크 및 카타르와의 반부패 협력 확대방안 논의로 아랍국가 대상 한국의 주요 반부패 법제 및 정책 전파의 계기 마련

○ 향후 계획

- 대한민국의 점검국 역할 수행과 관련한 솔로몬제도 대상 2주기 이행점검 및 신규 비준국인 니우에 대상 1주기 이행점검 대비
- 우리의 2주기 이행점검('19,6월~'20,6월)에 대비하여 점검 대상인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관련 국내 법제 개선, 이행 실적 제고 등 협약 이행노력 강화

3 2017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및 조정그룹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7. 11. 15.(수) ~ 11. 17.(금),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 주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ADB(아시아개발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 참석자 : 29개 회원국, 참관국 정부 반부패 관계기관, 국제기구 등 총 38개국 국내·외 참가자 338명

- 국외참가자 : 회원국 대표단, 연사, 국제기구 등 124명
- 국내참가자 : 반부패 관련기관 및 학계, 유관기관 등 214명

2. 회의 결과

○ 고위급 패널토론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단 14명이 '아태지역의 성공 사례와 도전과제, 향후 우선과제'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하였으며,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시행 1년 후 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 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함

○ **컨퍼런스(PIN 회의)**

- PIN 회의는 15일 ~ 16일 양일 간 총 4세션으로 진행하였으며, 청렴정책 개발과 시행, 유소년 청렴 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음
-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2세션 '지속가능개발목표 맥락에서의 청렴 정책'을 통해 새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하였음

○ **조정그룹회의**

- **(2016년 회의 논의 결과)** '16년 기존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조정그룹회의 외에 법집행과 예방을 주제로 2개 실무급 회의를 병행 개최하고, 다른 국가나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
- **(2018-2020 사업계획 논의 결과)** 향후 조정그룹회의에서 사업계획 이행 관련 논의에 집중하고, 별도로 PIN/LEN/기업 청렴성 관련 주제연구

및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자금조달 방안)** 사무국 측은 조정그룹회의 외에 PIN/LEN/기업 청렴성 세미나 및 연구를 위해서는 추가비용과 인력이 필요함을 설명
- **(PIN 회의 결과 보고)** 반부패기구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여 공공청렴성을 주제로 경험을 공유하게 된 것에 제1회 PIN 회의가 갖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홍보 및 교육 분야에 관심이 높았음을 소개함
- **(LEN 회의 결과 보고)** 이번 제3차 회의는 자산 몰수 및 회복을 주제로 사례 발표와 분임토론을 하였으며, 향후 LEN 회의에서는 '국제협력'과 '해외 뇌물 공여'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함
- **(기업청렴성)** 공기업 청렴성, 기업에 대한 형사적 책임 도입, 기업 연루 부패사건 수사 등을 주제로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
- **(차기 회의 개최지)** 사무국은 카자흐스탄과 내년 회의 개최 협의 중이며, 개최 시기와 장소를 확정하여 공지할 예정임

3. 평가 및 향후계획

○ **평가**

- 첫 시행되는 공공청렴네트워크(PIN)회의 구성 및 연사선정에 행사 주최기관으로서 적극 참여하여 향후 PIN회의 운영 방안 확립 등에 기여
- 의제 및 연사 선정 시 우리 정부의 부패 척결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반부패 전략과 청탁금지법 소개 기회 마련

○ **향후 계획**

- ADB/OECD 아태 반부패 이니셔티브 사무국 및 UNDP와의 미래 협력관계 구축 및 신규 협력사업 발굴 추진

④ 제5회 반부패 준법 아태지역 회담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7. 12. 7.(목), 홍콩 CORDIS Hotel

○ 주관기관 : 제5차 반부패 준법 아태지역 회담 조직위원회

※ (주관) 중국계 민간컨설팅 회사인 Duxes Business Consulting Inc

○ 참석자 : 국민권익위원회, 미국 법무부, 호주 연방 경찰청, 말레이시아 부패방지 위원회, 월드뱅크, 다국적기업 관계자 등 약 150여명

2. 회의 주요 내용

○ **위원회 활동**

- 부정청탁금지법 추진 배경과 의의, 주요 내용 및 사례, 시행 1년 후 성과와 변화, 향후 개선 방향 등 법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반부패 집행환경과 조사 최근 동향과 관련 패널 토론에 참여하여 한국의 부패 및 공익신고 제도 등 반부패 제도 소개

○ **각국 주제 발표**

- 미국의 반독점법 주요 내용, 호주의 반부패 센터 소개, 말레이시아와 방글라데시의 반부패 혁신 활동, 월드뱅크의 부패방지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사례와 실천적 내용 발표

3. 주요 성과

○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법 시행 후의 사회변화 등을 국제사회에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가 청렴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신고자 보호 정책에 대한 패널토론과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반부패 국제협력을 위한 기반 강화

4 옴부즈만 소식

▢ 영국: 의회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탁아동

※ 출처: UK 'Foster children disadvantaged by council policy' (IOI 홈페이지>News, 10.12.2017)

○ 지역정부·사회복지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회 정책 때문에 등하교 교통지원에 있어서 가정 위탁아동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릭셔 카운티 의회 정책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보다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위탁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옴부즈만은 현재 영국 전역의 지역의회에 위탁아 통학 지원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정 도보 통학거리 이외 지역에서 통학하는 위탁아동 보호자들이 위탁비용 이외의 별도로 등하교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아의 통학 비용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아동 보호자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 이렇게 위탁 보조금을 통학비로 써야하는 상황에서는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위탁아들이 가까운 학교에 다니는 위탁아들보다 경제적 지원을 덜 받게 된다. 이는 또한 위탁아들이 원가족의 보호 하에 법정 도보 통학거리 이외의 학교에 통학하면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다른 아동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마이클 킹 지방정부·사회복지 옴부즈만은 '인생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은 위탁아들을 위해서 지방 의회는 때때로 이들의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기존에 안정적으로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는 결정을 내리곤 한다. 이로 인해 멀리서 통학하는 위탁아와 그 보호자들이 불이익을 겪어서는 안 된다. 워릭셔와 같은 부당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많은 다른 지역의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의 조사 결과를 알리는 서신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 문제는 한 위탁가정 부부가 아동 위탁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워릭셔 지역의회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이 위탁한 아동이 집에서 7.4km 이상 떨어진 학교에 통학해야 했는데 워릭셔 지역의회에서는 통학거리에 따른 이동 지원금 없이 부부가 매일 직접 운전해서 아동을 통학시켜야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회에서 아동위탁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 내에서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부부는 위탁아동의 통학을 위해 5,000km 가까운 거리를 운전해서 이동해야만 했다.

○ 지방정부·사회복지 옴부즈만의 역할은 부당함을 바로잡고 지역 공공 서비스와 성인 대상 사회복지 개선을 위해 조사 결과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위탁아동 통학의 경우, 지역의회는 위탁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위탁아동 통학 기간 동안 소요된 비용을 변제하기로 했다. 지역의회는 또한 모든 위탁가정에 서신을 보내서 비슷한 문제를 겪은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모든 위탁가정에 보조금과 비용 지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 크로아티아: 에너지 빈곤층 방지 정책 발표

※ 출처: CROATIA 'New measures against energy poverty announced' (IOI 홈페이지>News, 10.23.2017)

○ 로라 비도빅 옴부즈만은 국제 빈곤 및 사회적 소외 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된 에너지 빈곤 회의의 개회사를 통해 빈곤은 인권의 적이며 국가는 사회의 최약층을 잘 보살피는 정도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주변에서 빈곤층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공식 통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마르코 크리스토프 크로아티아 통계청장은 '크로아티아인의 19.5%가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9.3%는 겨울에 충분한 난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비도빅 옴부즈만은 또한 '에너지 빈곤은 특수한 형태의 빈곤이며 크로아티아에는 이에 대한 통합적 정책이 없다. 개념 정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준도 없으며 측정이나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도 설정된 것이 없다'고 경고했다. 비도빅 옴부즈만은 또한 단기적 피해 구제 조치만으로는 에너지 빈곤 상태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으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빈곤이 국민의 건강과 노동력, 가족·사회적 관계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악영향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 이에 따라 모든 회의 참석자들은 딘 스몰라 환경·에너지부 대표의 대리인이 발표한 신규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스몰라에 따르면 빈곤의 위험에 처한 고객 상담과 빈곤 위험 가정 내 에너지 효율성 개선 조치 실행 등을 포함한 세 개의 정책이 기획 중이며, 여기에는 크로아티아 국고를 비롯하여 유럽연합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건설·공간계획부의 다이아나 호르바트는 3000만 유로가 가족 주택 재건축공사에 투입될 것이며 이 지원금이 사상 처음으로 사회복지 제공 기준에 따라 배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 비도빅 옴부즈만은 2014년부터 공공 정책과 에너지 빈곤 타파에 대한 정책적 영향을 모니터링 했으며 2016년 크로아티아 의회 연례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여러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에너지 효율화 재건축 재원 배분에 대한 사회복지 기준 도입 등 해당 권고안의 일부가 실제로 시행될 예정이다.

▢ 호주: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 관리 조사

※ 출처: AUSTRALIA 'Investigation into the management of maintenance claims against public housing tenant' (IOI 홈페이지>News, 12.04.2017)

○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 만료 후 청구되는 수리비를 허술하게 관리함으로써 공공재원을 낭비하고 있다.

○ 빅토리아주 옴부즈만 데보라 글라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파손에 대한 세입자들의 책임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 파손 수리비용 수천 달러가 이들에게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글라스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터무니없이 부당한 절차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마구잡이로 발생하는 이러한 수리비로 인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년 후 상당 규모의 부채를 떠안게 되면 이미 사회적, 경제적, 기타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이 된다. 이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준 후 정부와 싸우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리비 지급을 시작할 때까지 주택 관리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내가 아는 한 정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비양심적인 행위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 글라스 옴부즈만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전 세입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와 관리 방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전반적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수리비 전반을 무조건적으로 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관행
  - · 특수 상황 (가정폭력, 정신적 혹은 신체적 질병, 혹은 제 삼자에 대한 파손 증거 등)
  - · 최대 수천 달러 상당의 정당한 일상적 마손 및 감가상각비
- ▶ 전 세입자가 퇴거한 사실을 보건복지부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주소로 수리비 청구서 발송
- ▶ 세입자 혹은 그 변호인과 협상 부재

- ▶ 수리비 부채액 결정 책임을 빅토리아시민행정재판소(VCAT)에 사실상 위탁함으로써 공공 재원을 낭비하고 모범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할 책무 위반
- ▶ 수리비 지급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 세입자의 공공임대주택 임차 연장 보류

○ 글라스 옴부즈만은 '우리가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세입자의 책임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터무니없는 부채액을 산정하고 세입자가 퇴거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주소로 청구서를 보내거나 부채액 결정을 습관적으로 시민행정재판소에 위탁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모범 소송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는 빅토리아 시민행정재판소 주거 임차 소송 목록에서 단연 최상위를 차지하는 소송 당사인이고 보건복지부 청구 건의 80% 이상에 대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판소에서 보건복지부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보건복지부 청구액의 절반 정도가 실제로 세입자에게 청구된다.

○ 보건복지부에서 '파산상태(채무자의 재정 상황 상 보상 명령이 집행될 수 없는 상태)'인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에게도 비용 청구를 진행함으로써 관련 소송비용으로 공공 재원이 낭비되기도 했다.

○ 보건복지부는 옴부즈만의 권고안 18항목을 수용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약속했다.

- ▶ 수리비용 청구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에게 임차 전 부채 상환 계획 제출 요구 폐지
- ▶ 모든 파손 원인 및 수리비용 부담 책임 결정을 위하여 전 세입자와 협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자원 제공을 위한 변화 관리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 직원에 제공
- ▶ 새롭고 개선된 제도의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고위 공공주거복지 사용자 단체 설립

○ 글라스 옴부즈만은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빅토리아주 세입자 연합, 저스티스 코넥트 홈리스 로, 빅토리아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연합, 빅토리아주 법률구조공단, 서하이델베르크 법률구조기금, 멜버른 내륙 지방 법률구조공단, 빅토리아주 시민행정재판소의 그렉 가드 판사, 빅토리아주 시민행정재판소 케린 네그리 소장, 빅토리아주 시민행정재판소 케빈 벨 전 소장과 보건복지부 직원 등을 포함하여 조사에 협조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핀란드: 페트리 야스켈라이넨 옴부즈만 연임

※ 출처: FINLAND 'Petri Jaaskelainen continues as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12.04.2017)

○ 페트리 야스켈라이넨 법학박사가 4년 임기의 의회 옴부즈만으로 재선임됐다. 새로운 임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야스켈라이넨 박사의 선임은 2017년 11월 21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됐다. 야스켈라이넨 박사는 옴부즈만 선출에 입후보한 유일한 지원자로써 연임에 성공했다.

○ 야스켈라이넨 박사는 이미 2010~2013년, 2014~2017년 두 번의 임기에 걸쳐 옴부즈만직을 수행했다. 옴부즈만직 수행 이전에는 2002~2009년에 부옴부즈만으로서 두 번의 임기를 마치기도 했다.

○ 핀란드 의회는 4년 임기의 옴부즈만과 부옴부즈만을 선출한다. 선출 이전 헌법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자격을 평가하며 선출은 비밀투표로 이루어진다.

▢ 세계옴부즈만협회: 신임 아시아 지역 이사 선출

※ 출처: IOI ‘Asian Region elects new Director’ (IOI 홈페이지>News, 12.6.2017)

○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의 임기가 2017년 종료됨에 따라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의 아시아 지역 이사직이 공석으로 남게 됐다.

○ 아사드 아시라프 말릭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지역회장은 새로운 지역이사 선출 관련하여 사무총장에게 연락했고 사무국은 공석을 채우기 위한 전자투표를 실시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두 명의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했고 전자투표는 매우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총 18개의 회원 기관에 투표권이 주어졌고 그 중 13개 기관이 기한 내 투표를 마쳤다.

○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지역 이사로 선출됐다.

○ 이사직 수락 서신에서 박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아시아 지역 이사 선출되어 큰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사직을 수락한다. 세계옴부즈만협회와 옴부즈만 기관의 발전, 그리고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지역의 적극적 파트너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노르웨이: 오게 토르 팔캉에 옴부즈만 재선

※ 출처: NORWAY 'Aage Thor Falkanger re-elected as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12.11.2017)*

○ 오게 토르 팔캉에(Aage Thor Falkanger) 노르웨이 의회 옴부즈만의 4년 임기 연장이 2017년 노르웨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 팔캉에 옴부즈만은 1965년 오슬로 출생으로, 1991년 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민사법무 보좌관의 보조 변호사로 법조계 경력을 시작했다. 1992년부터는 노드-트롬스 지방법원 판사보로 일했으며, 1995년부터 트롬쇠대학교 법학부 연구원으로 일한 후 1999년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팔캉에 옴부즈만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홀로갈란 상소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트롬쇠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2007년 4월~7월, 2009년 2월~7월에는 대법관 대행으로 재임하기도 했다. 2007-2008년에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방문 연구원으로 일했다. 그 후 2010년부터는 노르웨이 대법원의 대법관직을 역임하고 현재는 의회 옴부즈만직을 위하여 휴직한 상태이다.

○ 오게 토르 팔캉에는 1962년 12월 안드레아스 샤이 대법관의 노르웨이 사상 첫 의회 옴부즈만 임명 이후 제 5대 의회 옴부즈만으로 일하게 됐다. 노르웨이 의회 옴부즈만은 의회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르웨이 의회에서 임명한다.

▢ 영국: 옴부즈만, '예방 가능했던 거식증 여성 환자 사망'

※ 출처: UK 'Death of woman from anorexia was avoidable, Ombudsman rules' (IOI 홈페이지>News, 12.11.2017)

○ 2012년 12월 5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했던 국민의료보험 관련기관들의 연이은 대응 실패로 인하여 한 19세 여성이 사망했다. 이 여성의 가족은 국민의료보험에서 제공했던 관리와 치료에 대해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 최근 빌 커컵이 이끈 옴부즈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진학을 위해 생애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불안정한 시기에 있는 해당 환자를 위한 관리 계획 및 협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 위탁병원 두 곳에서 받았던 관리와 치료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 여성 환자의 사망에 대한 지역차원의 조사 역시 미흡했으며 관련 기관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어적이거나 자기 보호에만 급급하는 식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해당 분야 제도 담당자 및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국민건강보험의 성인 섭식장애 관련 서비스에 광범위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보고서의 기타 사례별 사회복지사업 사례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기술되어 있다.

- ▶ 자살충동을 겪는 심각한 상태의 여성 환자가 충분한 관리 계획 없이 부적절하게 퇴원조치 된 이후 식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심장마비로 사망
- ▶ 일관성 없고 쓸모없는 치료를 포함한 국민의료보험의 여러 실수로 인하여 심각한 폭식과 구토 반복 증상이 있던 여성 환자가 약물 과다복용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

○ 의회·보건서비스 담당 롭 베렌스 옴부즈만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민의료보험이 섭식장애 환자들을 적절히 관리했더라면 이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민의료보험의 관리

실패와 딸의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가족의 분투는 이 경우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섭식장애 환자 가족들이 우리에게 접수한 민원을 통하여 국민적 관심이 시급한 중대한 문제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옴부즈만의 권고안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빌 커컵 옴부즈만은 또한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번 보고서가 국민의료보험과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향후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섭식장애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시급히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보고서는 섭식장애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다음 다섯 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 ▶ 정신적·신체적으로 복잡한 증상을 나타내는 섭식장애에 대한 수련의들의 지식 향상 교육
- ▶ 섭식장애 전문의 공급 확대
- ▶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섭식장애 환자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 ▶ 섭식장애 환자 치료에 대한 국민의료보험 기관 사이의 협력 개선
- ▶ 특히 여러 기관이 협업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케이스에 대한 조사 시행 및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국민의료보험기관에 정부 지원

○ 의회·보건 담당 옴부즈만은 현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민원제기 과정의 전반적 개선과 관련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3개년 계획을 수립 중이다.

5 참고 자료

▢ 아태지역 내 반부패기관 강화

○ **제목**: Strengthening Anti-Corruption Agencies in Asia Pacific

○ **저자**: TI 국별 지부

○ **후원**: 국제투명성 기구

○ **개요**: 아태지역 내 반부패기관에 대한 TI 국별 지부에서 평가(2013~15)한 결과를 모아놓은 보고서로,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네시아, 몰디브, 파키스탄, 스리랑카 6개국 반부패기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

분야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네시아	몰디브	파키스탄	스리랑카
법적 독립성	78	93	71	79	71	93
재정 및 인적 자원	61	78	55	42	67	72
탐지 및 수사	56	78	72	58	61	50
예방, 교육, 홍보	72	59	72	70	56	67
다른 조직과의 협력	70	92	100	40	80	40
책임성 및 감독	63	57	87	62	83	25
대중의 인식	29	17	100	NA	50	50
국별 평균	**61**	**72**	**80**	**59**	**67**	**57**
CPI(15년 순위)	139	27	88	95	117	83

○ **지표 소개**: 총 7개의 지표와 50개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여, 세부지표별 점수를 단순 합산

▪ **독립성 및 법적 지위(7)**

1. 법적 독립성 (우수 2점 / 중간 1점 / 낮음 0점, 이하 지표별 점수 동일)
2. 기능
3. 법적 권한
4. 위원장 임명
5. 위원장 임기 및 해임
6. 운영상 자율권과 공평성
7. 정적에 대한 무기로 ACA 활용

- **재정 및 인적 자원(9)**

8. 정부 총예산 대비 ACA 예산 비율(지난 3년간)
9. 기능 수행시 예산의 충분성
10. ACA 예산의 안정성
11. 개인 급여 및 수당
12. 인원 선발 기준
13. 부패사건에서 조사관 전문성
14. 부패 예방 및 교육에서 담당자의 전문성
15. 인적자원의 훈련
16. 인적 자원의 안정성

- **탐지 및 수사 기능(9)**

17. 일반인 및 신고자 등 부패에 대한 접근성(지난 3년간)
18. 부패 신고에 대한 대응성(지난 3년간)
19. 부패 수사 개시 노력
20. ACA 조사관이 수사한 평균건수
21. ACA가 조사한 부패사건의 효율성 및 전문성
22. ACA 수사한 부패사건의 평균유죄비율
23. 고위직 부패에 대한 공정한 조사
24. 상환, 자산회복, 동결, 몰수에 있어 ACA 역할
25. 부패신고 통계 및 경향을 모니터링하는데 성별을 구분하는지

- **예방, 교육, 현장지원(9)**

26. 시민홍보 및 예방에 배정된 운영예산 비율
27. 부패예방 정책
28. 부패예방을 위해 ACA가 수행한 조직 절차 검토 횟수
29. 수사보고서내 부패예방 권고의 포함 횟수
30. 홍보 및 교육 계획과 이행
31. 홍보 및 교육활동에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32. 부패 위험, 배경, 조건에 대한 연구 및 탐구
33. 부패예방 정보의 배포 및 캠페인 활용
34. 부패예방에 대한 정보 배포시 웹사이트 및 SNS 활용

▪ **다른 조직과의 협력(5)**

35. 부패사건 기소 관련 검찰의 지원
36. ACA와 기타 반부패 기구들간의 협력
37. ACA와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간의 협력
38.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
39. 타국의 ACA와의 협력

▪ **책임성과 감독(4)**

40. ACA의 백서 및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및 접근성
41. ACA의 감독 메카니즘
42. ACA 직원에 대한 민원 처리 절차
43. 비위로 인한 징계 및 해임된 ACA 직원 비율

▪ **ACA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7)**

44. 정부가 ACA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제공한다는 대중의 믿음
45. ACA의 권한 사용시 절차적 적절성, 공정성, 공평성을 준수한다는 대중의 믿음
46. ACA와 직접 접촉한 사람들이, ACA 권한 사용에 있어 절차적 적절성, 공정성, 공평성을 준수한다는 믿음
47. ACA가 조사중인 사람을 적절히 대우한다는 대중적 신뢰
48. 부패통제에 있어 ACA의 효과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
49. ACA와 직접 접촉한 사람들 중, 부패통제에 있어 ACA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50. ACA와 직접 접촉한 여성들 중, 민원처리에서 ACA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기관별 개요

구 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네시아	몰디브	파키스탄	스리랑카
기관명	반부패위원회 (ACC)	반부패위원회 (ACC)	부패방지위원회 (KPK, CEC)	반부패위원회(ACC)	국가책임청 (NAB)	뇌물부패수사위원회(CIABOC)
설립	반부패위원회법 2004	왕령, 2005년	법 제30호, 2002년	조직령, 2008년	국가책임성 명령, 1999년	뇌물법(1954, 1994), 자산및부채신고법 (1975, 1994), 제17차 헌법에 근거, 2001년 설립
구성	3명 위원,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에서 추천, 대통령이 5년 임기로 임명	3명 위원, 위원장은 5명 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5명 위원(1명 위원장, 4명 부위원장)	5명 위원(1명 위원장, 4명 부위원장)	위원장, 책임검찰총장, 부위원장, 6명 부서장	위원장, 2명 위원, 5년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
책임성	대통령	2개의 의회 위원회가 연간보고서 검토	의회 소속	의회 소속	외부 감독 메카니즘 없음. 대통령에 보고	대통령에 보고, 의회 감독
예산 (15-16년)	0.78백만	1.9백만	정부예산의 0.10%	1.85백만	27.4백만불	1.68백만불
인적 자원	1,264	78	-	102	-	정원 802명 조사관 (현원 353명)
관할	국회의원, 사법부, 경찰, 군, 기타 공직, 국영기업, 공공계약업자, 비정부기구/자선단체, 기업	-	국회의원, 사법부, 경찰, 군, 기타 공직, 국영기업, 공공계약업자, 비정부기구/자선단체, 기업	-	국회의원, 사법부, 경찰, 군, 기타 공직, 국영기업, 공공 계약업자,	국회의원, 사법부, 경찰, 군, 기타 공직, 국영기업, 공공계약업자, 비정부기구/자선단체, 기업

▢ 아태지역 국가의 반부패기관: 활동 평가 및 과제

○ **제목**: Anti-Corruption Agencies In Asia Pacific Countries: an Evaluation of their Performance and Challenges

○ **저자**: Jon S.T.Quah (싱가포르 반부패 컨설턴트), 2017년 11월 발간

○ **후원**: 국제투명성 기구

○ **개요**

- 아태지역 반부패 기구는 2 종류가 있음. A형은 반부패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보다 효과적임. B형은 반부패와 기타 반부패 이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덜 효과적임. 아태지역 27개국에 있는 42개 반부패기구 중 A형은 24개이고, B형은 18개임
- 이들 반부패기구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점: 4가지 핵심 성공 요소로는 (1)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 (2)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갖춘 A형 반부패 기구의 설립 (3) 정치적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상 자율권과 법적 권한 제공 (4) 정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가 필요하며, 가장 핵심적 요소는 1번임
- 비효율적인 반부패 기구의 중대한 문제로는 (1) 정적 제거를 위해 반부패 기구를 이용 (파키스탄과 중국 사례) (2) 필요한 자원 없는 종이 호랑이 형 반부패 기구의 설립 (필리핀, 대만, 한국 사례)
- 아태지역 반부패 기구가 당면한 과제로는 (1) 민간 부분 부패 위협의 확산 (2) 경찰 부패에 대한 척결 노력 유지 (3) 유능한 인력 유인 및 유지
- 의사결정권자의 선택지로는 (1) 반부패기구 설립 없이 기존 기구 강화 (뉴질랜드) => 대부분의 아태 국가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음 (2) 여러 개의 반부패 기구 운영 (아프가니스탄,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대만, 베트남) => 기구간 조정 미비 및 제한적 자원 경쟁으로 효율적이지 않음 (3) 독립적인 단일 반부패 기구의 설립(홍콩, 싱가포르)

○ 참고사항

<반부패기구의 1인당 비용 및 인구대비 인력 비율>

반부패기구	예산(백만불)	인력	1인당 비용	인력:인구 비율
홍콩 IACA	120.14	1,358	16.59	1:5,333
싱가포르 CPIB	29.30	205	5.36	1:26,682
피지 FICAC	3.76	132	4.24	1:6,711
한국 ACRC	58.30	465	1.15	1:108,430
대만 AAC	14.40	240	0.61	1:97,641
필리핀 OMB	38.80	1,214	0.39	1:81,631
방글라데시 ACC	5.99	1,264	0.37	1:127,369
인도네시아 KPK	50.17	1,102	0.19	1:230,943
파키스탄 NAB	20.52	402	0.11	1:461,442
인도 CBI	65.50	5,676	0.05	1:228,206

<반부패 기구내 인력 공백 2014-2015>

반부패기구	연도	정원(100%)	현원	정원/현원 비율
홍콩 IACA	2015	1,443	1,351	94%
인도 CBI	2014	6,676	5,676	86%
방글라데시 ACC	2014	1,264	960	76%
필리핀 OMB	2014	2,194	1,214	55%
부탄 ACC	2015	128	70	55%
스리랑카 CIABOC	2015	802	353	44%

○ 한국 관련 언급

- “한국은 부패방지위원회 및 그 후임 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의존하고 있어 부패 제어에 비효과적이다. 이들 기구들은 부패 사건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이 호랑이다. 부패는 한국에서 상습적인 문제이며, CPI 점수는 2012-2016년간 53-56점 사이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PERC의 부패 조사 결과는 동 기간 중 6.90에서 6.17로 약간 개선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1월 부방위를 신설하면서 홍콩의 IACA를 모방하면서 조사권이 없는 허약한 기구를 만들었다. 이는 입법시 국회, 검찰, 경찰에서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으로, 검찰과 경찰은 각기 반부패 기능을 수행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약해 중립적 법 집행에 장애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2001년 7월

반부패법의 제정으로 부패사건을 조사할 수 없는 종이호랑이 부방위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한계가 부방위의 아킬레스 건이었으며 부방위는 부패 예방과 교육기능에 대신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반부패 기구가 되지 못했다. 부방위의 2번째 약점은 공공부문 부패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 부방위 반부패 기능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충위와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면서 더욱 희석되었다. 그러나 이들 3개 기관의 합병으로 이루어진 권익위의 신설로 기능성 연관성과 일관성이 허약해져, 반부패 역할이 흐릿해졌다. 권익위는 조사권이 없고 공공분야 부패만을 다루는 부방위의 약점도 계승하고 있다. 권익위의 효과성 제고 대신, 부방위가 고충위와 행정심판위원회와의 통합 결과는 반부패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춤으로써 기존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희석하는 것이다.
- 부방위와 권익위에 의존하는 전략은 비효과적이기에, 지난 5월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서 부패 제어에 노력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헛된 전략은 포기해야 한다. 세계 부패 바로미터에서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을 평가하는 한국인 응답자 중 7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은 놀랍지가 않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성공을 통해 학습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권익위를 부패사건을 조사하고, 부패를 예방하고, 시민을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A형 반부패기구로 대체해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반부패기구는 필요한 법적 권한, 예산, 인력, 운영상의 독립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현재 고위공무원 관련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새로운 반부패 기구 설립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동 기구의 권한과 기능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의견이 갈려 있다.“

▢ 대한민국 2017 세계자유보고서

2016년 점수				
상태	총점	자유등급	정치적 권리	시민적 자유
자유	82/100*	2/7**	2/7	2/7

* 0=Least Free, 100=Most Free / ** 1=Most Free, 7=Least Free

개요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권력의 정기적 교체와, 보수와 진보 2개 거대 정당이 있는 건강한 정치적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개인의 자유는 전반적으로 존중되나, 한국은 탈북자, LGBT(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이민자 등 소수자 인권과 사회적 통합 문제를 겪고 있다. 국민들에게 친북 활동은 법적 금지 대상이며, 이는 때로 적법한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2016년 주요 변화

4월 총선에서, 진보 야당인 민주당이 당황스런 승리를 하면서, 보수당인 여당 새누리당을 근소하게 눌렀다.

10월에 발생한 스캔들로,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지인의 국정농단과 부패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박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 걸쳐 이어졌고, 국회에서는 12월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연말까지 동 사안을 심의하고 있다.

요약

2016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근소한 승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이는 유권자들이 정체된 경제, 점증하는 부패 스캔들, 권력남용 사건, 북한과의 긴장 상승,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반테러리즘법의 통과 등에 대한 분노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10월 언론을 통해 박대통령과 가까운 지인인 최순실과의 관계를 둘러싼 스캔들이 드러났다.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비밀정보 접근을 허용했으며 최는 관계를 이용해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제3자로부터 금전과 혜택을 강요하였

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순실은 체포되었으며, 여러 건의 수사가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다.

박대통령은 애초에 최순실의 비행에 대해 2번 공개 사과를 발표했으며, 의심을 받고 있는 공직자를 교체하였고, 새로운 총리를 추천하였으나,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추천을 바로 거부하면서, 현직 황교안 총리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대는 규모가 점차 커졌으며, 국회는 12월초에 결국 탄핵안 투표를 했다. 헌법재판소가 박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판단할 때까지 집행권한은 총리에게로 이양되었다.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 결정되어야 하며, 이후 대통령 선거가 열리거나, 박대통령이 권한을 다시 갖게 될 것이다.

정치적 권리: 32 / 40 (-2) * 받은점수/최고점수(전년대비)

A. 선거 과정: 11/12

A1. 정부 또는 기타 국가기관의 수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되나?
A2. 전국단위 입법부 대표들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되나?
A3. 선거법과 제도는 공정한가?

1988년 개정헌법에 따라 직접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집행권한이 부여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은 불가하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52대 48 퍼센트로 이기면서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단원제 국회는 300명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이 123석을 얻었고, 새누리당은 122석만을 얻었다. 중도당인 국민당은 38석을 얻었고, 소수당과 무소속이 나머지 17석을 가져갔다. 진보와 중도 야당이 총 167석을 차지했음에도, 이는 주요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절대다수 180석을 얻는데 실패하였다.

2016년 12월 국회는 최순실 스캔들로 불거진 비리 혐의로 박대통령 탄핵안을 234대 56표로 가결하여, 동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의 결정까지 총리에게로 넘어갔다.

B. 정치적 다원주의 및 참여: 13/16

B1. 시민은 정당 또는 기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정치모임에서 조직화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가, 제도적으로 이들 정당 및 모임의 성공과 실패가 개방적인가?

B2. 야당 표가 어느 정도 있으며 선거를 통해 야당이 지지를 확대하거나 권력을 잡는 현실적인 기회가 있는가?

B3. 시민의 정당 선택은 군대, 외세, 전체주의 정당, 종교적 위계질서, 경제적 지배층, 기타 지배그룹으로부터 자유로운가?

B4. 문화, 인종, 종교, 기타 소수 그룹에게 전면적인 정치적 권한과 선거 기회가 주어지는가?

복수의 당이 정권을 위해 경쟁하고 행정부 구성이 교차되는 측면에서 정치적 다원주의는 견고한 편이다. 2016년 기준 2대 주요 정당은 여당인 보수 새누리당과 진보 민주당이며, 정당 구조와 연정은 상대적으로 유동적이다. 2016년 12월 박대통령의 탄핵 이후, 새로운 개혁 보수당이 새누리당으로부터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2014년 12월, 유일하게 최초로 정당(통진당)이 친북활동을 금지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와 별개로, 국가정보원은 최근 몇 년간 정치 간섭 및 2012년 박근혜 측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일련의 스캔들에 연루되어 왔다.

인종적 소수자들은 법에 따른 정치적 권한을 전면적으로 향유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대표권을 얻은 적은 거의 없다. 필리핀 출신인 새누리당 쟈스민은 2016년 선거에서 의원직을 잃으면서, 국회내 외국인출신 의원은 한 명도 없다.

C. 정부의 기능: 8/12(-2)

C1. 자유로이 선출된 정부 수반 및 입법부 대표가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가?

C2. 정부는 만연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가?

C3. 정부는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에도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는가, 정부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되는가?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비선출 기구나 이해관계로부터 부당한 간섭 없이 국정을 결정하고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영향력 행사, 금품요구는 정치권과 업계 일상생활에서 계속되고 있다.

논란중인 김영란 법은 2016년 9월 발효되었는데, 뇌물수수로 유죄를 받은 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며, 선물과 특혜간의 직접적 연관관계를 증명할 필요를 없앴다. 동 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또한 그 배우자, 언론인, 교사들 대략 4백만 명에게 적용된다. 동 법은 이해충돌이 아닌 상황에서 허용 가능한 식사비와 선물비 한도를 정하고 있다.

10월 주요 부패 스캔들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과, 공직 직위가 없는 최순실간 광범위한 결탁이 드러났다. 언론과 수사를 통해 박근혜 행정부는 비밀과 심지어 비밀등급으로 분류된 정보까지 최순실과 공유하였고, 최는 박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국정에 간섭하고 주요 대기업 등 다른 이들에게 금품이나 혜택을 요구하였다. 최순실은 체포되었으며, 특별검사가 동 사건에 배당되었다. 박대통령 자신은 헌재에 의해 공식적으로 파면될 때 까지 기소면제 대상이다.

시민적 자유: 50/60(+1)

D. 표현과 양심의 자유: 13/16(-1)

D1.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및 기타 형태의 문화적 표현이 존재하는가?

D2. 종교단체와 지역사회는 자유로이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며 공적 사적 공간에서 신념을 표현하는가?

D3. 학문적 자유가 있는가, 교육제도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가?

D4. 사적 토론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가?

뉴스 매체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고 경쟁한다. 신문은 민간이 소유하고 정부 정책과 정부 및 기업의 비리에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나 일부 공식적 검열 유형은 합법이다. 1948년 북측의 간첩행위와 기타 위협을 막기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하에서, 북한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것과 친북 메시지를 온라인에 포스팅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당국은 친북 성향을 띤 것으로 보이는 수십만 건의 포스팅을 삭제하면서, 포괄적으로 작성된 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을 차단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낳고 있다. 주요 신문사 기자들은 때로 관리층이나 정부로부터 정치적 간섭에 직면한다. 박근혜 행정부하에서, 정부 비판자들에 대해 최대 7년형까지 선고되는 명예훼손 혐의를 보다 자유로이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언론은 2016년 기간에 최순실

스캔들을 광범위하게 보도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실제로 존중된다.

학문의 자유는 거의 제한이 없으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 정권이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발언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부패방지법은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와 동일한 감시하여 두면서, 정부의 영향이나 위협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증가시킨다. 2015년 말 박근혜 정부는 중고등학교에서, 여러 개에서 선택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작성한 역사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6년 박대통령의 탄핵 이후 이 조치를 뒤집었다

사적 토론은 자유로우며 공개적이고, 정부는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일반적으로 존중한다. 도청 관련법은, 정부가 전화통화, 우편물, 이메일을 감시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2016년 3월 새로운 반테러리스트법이 야당에 의한 8일간의 필리버스터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다. 동법은 국정원에게 도청에 대한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며, 모호한 "테러리즘" 개념으로 국정원이 온라인 등에서 정부 비판자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E.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1/12

E1. 집회, 시위, 공개토론의 자유가 있는가?

E2. 비정부조직에 대한 자유가 있는가?

E3. 자유 노조 및 농민단체 등이 있는가, 효과적인 공동협상이 있는가? 자유로운 직종 및 기타 민간조직이 있는가?

정부는 일반적으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며, 이는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몇몇 법률 조항은 이들 원칙과 상충됨에 따라, 법 조항의 적용을 두고 경찰과 시위자들 간 대립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이 금지된다. 모든 시위는 경찰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내 비정부단체는, 시위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찰이 동법에 따라 시위자들과 마찬가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015년 일부 폭력적 반정부 시위 이후, 2016년 6월 UN 집회 및 결사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한국 경찰의 방법이 과다한 물대포 및 바리케이드 버스 사용 등으로, 시위 중 충돌과 부상 위험을 높였다고 비판하였다.

경찰과 시위대는 2016년 7월-정부가 한국에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발표를 시작한 때-부터 시작하여 12월 박대통령의 탄핵 직전 정점을 이룬 일련의 정치적 시위 중 심각한 충돌을 피했다.

인권단체, 사회복지기관, 기타 NGO는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자주적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파업과 시위를 조직하는데, 간혹 구속되기도 한다. 하지만 노조는, 특히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일반적으로 파워와 인기가 줄어들고 있다. 몇몇 노조원들은 2015년 노동 관련 정치적 시위 혐의로 2016년 기간 중 구속되어 있으며, 민노총 위원장은 시위폭력 관련 혐의로 2016년 7월 5년형을 선고받고, 12월에 항소심에서 3년형으로 감형되었다. 지난 9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지부에서 근로자 해고가 더 용이해지도록 한 새로운 근로기준에 반대하는 파업을 시작했다. 7천명 이상의 운수산업 지입사업자들의 운송부문 규제폐지안을 반대하는 파업은 정부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었고, 수십 명의 체포로 이어졌다.

F. 법치: 13/16

F1. 독립적 사법부가 존재하는가?

F2. 민사 형사에서 법치가 지배하는가? 경찰은 민간의 통제하에 있는가?

F3. 체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에 의한 정치적 테러, 부정당한 수감, 망명, 고문으로부터 보호되는가? 전쟁과 봉기로부터 자유로운가?

F4. 법, 정책, 관행에서 다양한 집단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보장하는가?

한국의 사법부는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판사가 모든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한다. 배심재판은 없지만,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시행되었고, 판사는 대개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한다. 한국내 교도소에서 교도관에 의한 구타나 위협에 대한 보고는 별로 없다.

한국에서 소수 민족이 법적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민족이 아닌 거주자들은 시민권을 얻기가 극히 어려우며, 이는 출생지가 아닌 부모 혈통에 기반하고 있다. 시민권이 없으면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일부 대기업에서 취업기회가 제한되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출생자의 자녀들은 인종차별과 교육과 의료에서 제도적 배제를

경험한다. 한국에는 2만여 명의 국적 없는 아동이 있다고 추정된다.

2016년 말 한국에는 약 3만 명의 북한 탈북자가 있다. 탈북자는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도착 시 몇 달간의 격리와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일부는 보호기간 중 학대와 사회적 차별을 보고했다. 2016년 3월 국회는 북한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한 지침을 신설하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인권 대화와 인도주의 지원을 다루는 장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부 내 인권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권재단이 이들 사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노력하는 비정부단체를 지원한다.

동성 간의 성관계는 합법이며, 법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나 성전환자는 특별히 보호되지 않으며, 동성애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상존한다. 2016년 7월 헌재는 남성 군인 간 성행위를 금하는 군형사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G. 개인의 자율성 및 개인의 권리: 13/16

G1. 개인은 여행 또는 주거, 고용, 고등교육기관의 선택에서 자유를 향유하는가?

G2. 개인은 자산을 소유하고 개인 사업을 설립할 권리가 있는가? 개인 사업 활동이 정부 공직자, 군, 정당 및 조직, 조직범죄에 의해 부당한 영향을 받는가?

G4. 기회의 공평성이 있으며 경제적 약탈로부터 자유로운가?

한국에는 국내외 여행의 제한이 없고, 정부 승인이 필요한 북한 방문만 예외이다. 한국은 사적 소유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법인 및 기타 사업체 설립을 주관하는 법이 잘 발달해 있다.

한국에서 여성은 법적인 평등을 누리며 2005년 대법원은 기혼 여성에게 상속과 관련한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실적으로는 여성은 사회 및 고용 차별을 겪으며, 정부내 여성 비율이 여전히 낮다. 2016년 WEF 性격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양성평등 측면에서 144개국 중 116위였다. 2016년 1월 가정 폭력 척결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스토킹에 대해 현행법상 소액 벌금 대신 최대 2년형 등 보다 강력한 처벌안을 마련했다.

2016년 5월, 동성결혼의 인정을 구하는 최초 소송이 지방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가족등록법상 결혼을 서로 다른 성의 결합이라는 정의를 유지했다.

외국이민노동자들은 강제성매매 등 채무노예와 강제노역에 노출되어 있다. 국제결혼 브로커가 모집한 한국 여성과 외국인 여성들 역시 성매매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인신매매사건을 기소하고 있으나, 유죄가 확정되어도 가벼운 처벌을 받곤 한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규정한 법을 뒤집었다. 동성 결혼은 불법이다. 7월, 남남 커플이 결혼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판결은 올해 말 예정이다.